



가계 행위의 녹색화: 공공 정책의 역할

국어 개요

- 가계의 소비 패턴과 행위는 천연 자원의 비축과 환경의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는 사람들이 그들의 구매와 행위에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반영토록 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도입하였다. 최근에 마련된 방안을 보면 백열전구의 단계적 폐지, 가정을 위한 에너지 효율 라벨 도입, 그리고 대체연료 차량 구입에 대한 조세 유인책 제공 등이 있다.
- 정부들이 보다 환경적으로 지속적인 소비 패턴을 장려키 위한 전략을 강화시키는 가운데 가계를 주제로 한 금번 OECD 보고서에서는 실제 효과가 있는 전략과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이해시키도록 한다. 이번 연구는 다음의 다섯 분야에 초점을 두어 가계의 물 사용, 에너지 사용, 개인 교통수단의 선택, 유기농 식품 소비 그리고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을 검토한다.
- 본 보고서에서는 설문조사의 응답을 분석한 주요 결과와 함께 이들의 정책적 함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호주, 캐나다, 체코,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10 개 OECD 국의 1 만 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답변에 기초하고 있다.

적합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해답이다

연구 결과를 보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적합한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며 가격에 기초한 유인책이 에너지와 물 절약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내는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물 사용량이 약 20% 적으며 또한 가정에 효율적인 물 절약 장비를 설치할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각 가정이 발생한 혼합 폐기물에 기초한 요금 부담은 가계의 재활용 부피를 늘게 한다. 마지막으로, 높은 연료비는 자동차 소유나 사용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전 연구 결과를 재확인시키고 있다.

아울러, 물 사용량에 기초한 요금제는 가정의 소비 수준에 대한 신호가 되어 부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입증된다. 사실 설문 답변에 따르면 전기나 물 소비량이 가구 단위로 측정되지 않는 응답자들은 현재 가정 내 물과 전기 소비 수준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그 가격이 매우 낮다 해도 환경과 관련된 자원 사용을 계량화하고 요금을 내게 하는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각 가정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 알리는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최근의 캠페인들이 가격이 낮은 경우에도 가정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배출은 줄이고 천연 자원을 보존하려면 전기, 물, 연료 또는 폐기물 처리 서비스 등의 가격과 상대 가격의 변화에 기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정보와 교육은 중요한 보완적 역할을 한다.

설문조사는 가격에 기초한 정책의 중요한 역할에 더하여 수요 측면의 변화를 끌어내는 데 있어 소비자 정보 제공과 대중 교육에 기초한 보다 "연성적인" 도구가 맡을 수 있는 중요한 보완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얻어진 결과를 보면 연성 정책은 정책 도구의 사전 평가에서 보였던 수준보다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인식과 환경에 대한 가정의 관심, 그리고 이 요소들이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특히 주목한다. 다른 사안보다 환경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한 응답자는 환경에 미치는 타격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택하고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환경 인식은 물 절약을 위한 행동의 주 원동력이며 자동차를 소유할 가능성을 낮춘다. 아울러 환경에 대한 관심은 폐기물 재활용 강도와 유기농식품 소비에 대한 결정은 물론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떤 경우에는 간접적 효과를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고체 폐기물 생성에 대한 우려가 병에 담긴 생수를 마실 가능성을 낮추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이는 사람들의 환경 인식을 제고하고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보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중대 임무임을 시사하고 있다. 소비 선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는 정책에 대한 정치적 수용을 높여 정책 집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일단 이행된 정책은 가계들이 적당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기에 그 집행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설문응답자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미치는 영향은 물론 보다 일반적으로는 인간의 사회적 규범과 환경적 규범이 갖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규범이 몇몇 있는데 예로 정부 정책으로 보호해야 할 환경재를 바라보는 시각을 들 수 있다. 이는 재활용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하려 하는 가계의 의지에 드러난다. 아울러 시민의 의무와 같은 본질적인 동기가 우리들의 재활용 노력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결과도 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는 각종의 정책방안이 개인의 근본적 규범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규범, 정책 도구, 가계 의사결정의 3 요소 간 관련성에 대한 추가 연구는 유용하게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가 자신의 구매 결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강력한 친환경 규범을 갖추고 있다 해도 이에 맞는 행동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이들이 객관적인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제품의 특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유용하다는 점이 연구결과에서 강조된다. 에코 라벨이 효과적이라면 보다 명료하고 이해가 쉬워야 하는 만큼 그 자체로 에코 라벨의 식별과 이해를 보다 용이하게 만드는 대책들이 더 큰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제공된 정보와 정보의 출처에 대한 신뢰 역시 효과를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울러 라벨은 "공공" 혜택과 "개인" 혜택이 모두 확인될 경우에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절약 행동에 따른 에너지 비용 절감과 같이 소비자에게 보다 직접적인 개인 혜택이 환경적 혜택과 공존한다면 사람들은 에코 라벨을 따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많은 응답자들이 유기농 식품 소비를 개인의 건강 혜택과 연관시키는 것도 또 다른 예가 된다. 특히 사람들이 환경 품질 개선을 위한 대가를 치르려는 의지에는 한계가 있기에 에코 라벨은 이와 같은 개인적 혜택 잠재력을 보다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급 측면의 활동을 통해 수요 측면의 정책을 보완

가격과 정보를 통해 환경 품질에 대한 가계 수요를 촉진하는 것이 핵심인 가운데 가계에 대한 환경관련 공공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보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재활용 물품 수거 서비스, 대중교통 수단 제공 또는 전기 공급 특성 등에 관한 정책도 분명히 중요 사안이다. 실제로 수요 측면의 정책은 환경관련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병행하여 실시하면 개인의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 결과에 나타났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이 가계의 차량 보유 여부와 주행거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설문조사에서 확인된다. 또한 재활용 물품 수거 서비스의 존재와 품질이 재활용 참여와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활용 수준은 가정에서 문전수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 제공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염두에 두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예로 대중교통수단 경우에 가장 가까운 정류장이 거주지에서 5 분 이내 거리에 있으면 사람들의 대중교통 이용은 크게 증가한다. 그러나 이 정도로 대중교통수단의 밀도를 높인다면 과도한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폐기물 경우에 처리장이 문전수거처보다 재활용률 측면에서 덜 효과적일 수 있지만 후자는 서비스 제공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계 수요의 여력으로 환경 친화적 결정을 이끌어내기에 역부족인 분야에서는 정부가 공급 측면의 대책에 특히 많이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재래식 에너지보다 풍력이나 태양 등의 "녹색"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비용을 많이 부담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한 내용이다. 사실, 녹색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현재 전기료보다 5 % 더 지불할 준비가 된 가구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절반 이상은 아무것도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기존의 대체 식품보다 보통 15% 가격이 높은 유기농 식품을 소비하기 위해 상당한 가격 프리미엄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30 %가 유기농 식품을 사기 위해 어떠한 추가 비용도 낼 생각이 없었다.

이는 환경 품질에 대한 가계의 잠재 수요가 야심찬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치 못할 수 있음을 뜻한다. 환경파괴적인 행동과 소비에 부과하는 비용을 충분히 올리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데 상당한 정치적 제약이 있다면 공급 측면의 조치가 상당한 보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행동의 변화를 촉진시키려면 정책 도구를 혼합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문조사 결과는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혼합이 필요해질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시장 수단, 정보위주의 정책, 공급측 정책의 혼합사용에 대해서는 위에서 논의했다.

아울러 가계의 행동 변화를 목표로 한 정책 패키지 시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가계가 적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가전제품이나 차량 등의 자본재 투자와 관련된 선택, 그리고 주거지의 위치나 특징까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에서 환경 문제에 대처하려면 가격 인센티브에 대한 반응이 늦다는 사실을 고려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가계들이 내구재 재고와 생활 방식을 조절하기 전까지 단기 대응이 제한될 수 있으며 결정 시점별로 다양한 조치를 취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가격 조치와 같이 사용에 더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가 있는가 하면 라벨처럼 투자 결정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도 있다. 이는 각 정책수단이 서로 유용하게 보완하는 방식을 분명히 나타낸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시키는 특정 유형의 투자가 시장 장벽과 실패로 인해 위축된 경우에는 정책 입안자가 보완 대책을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열에 대한 투자로 보는 혜택이 자가 점유자에 비해 세입자에게 훨씬 적을 가능성이 있다. 임대주택 경우에는 단열 투자에 따른 혜택이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주로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집주인은 이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입자 역시 특히 오랫동안 머무를 계획이 아니라면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자산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을 것이다. 임대 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이 이러한 장벽을 완화시킬 순 있으나 신중히 설계해야 할 사안이다.

차이를 인식하고 특정계층을 겨냥하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인구계층마다 환경 행동과 정책에 대한 반응이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폐기물 정책에 대한 반응은 주택 유형은 물론 가계의 거주 여건이 농촌인지 도심지인지에 따라 다르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차이들이 인구계층 간의 비용과 선호도의 차이를 반영하며 반드시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지는 않다. 정책 대상 설정의 효율성을 평가할 때 대상 설정과 관련된 비용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로 보는 혜택이 추가 발생 비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치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설문조사 결과는 정보 및 홍보 캠페인의 대상이 되어야 할 특정 계층을 식별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연령, 교육 등의 인구통계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은 정책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인구계층을 별개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교통수단 선택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보캠페인은 남성, 중년, 고소득자, 고학력자와 같이 자가용 사용이 가장 많은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할 때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번 연구에서는 소득분배문제나 주택정책을 다루는 소득재분배 정책과 같은 환경 외 정책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보완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많은 환경정책들이 소득분배 측면에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데 설문조사는 특히 주거용 물 사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수도 요금 인상은 거주용 물 사용료가 고소득 가구에 비례하여 2 배 이상 높은 저소득 가구에 가장 많은 역효과를 낼 수가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이와 같이 소득계층 간에 있을 수 있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할 때에 정책의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에 미치는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 내 에코 혁신 도입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면서 수요 측면의 환경정책 분석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늘고 있다. 다음번 OECD 가계 설문조사는 2011 년에 실시될 예정으로 중점 사항은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확인하고 녹색성장과 저탄소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